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한국원폭2세환우회, 합천평화의집, 김형률
발 신 추모사업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한일반핵평화연대
문의 : 이우성 010-4878-1674 spark946@hanmail.net)
제 목 [보도자료]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원폭피해자 단체와 지원 단체 공동기자회견
날 짜 2019. 2. 21(목) (총 7쪽)

보 도 자 료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원폭피해자 단체와 지원 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로 인한 강제 징용과 피폭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온 한국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 3.1운동 100주년 맞아 원폭피해자와 후손들, 지원단체 회원 70여명 청와대 앞 기자회견 개최
- ▷피해실태 전면조사 및 비핵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 정부 기념사에서 한국원폭
피해자 문제 해결 의지 천명 촉구 ▷ 74주기 원폭 희생자 추모제에 문재인 대통령 추모사와 피
폭자, 피폭 2세 등 후손을 위로하기 위한 합천 방문 요구
- ▷민간차원에서 한국원폭피해자실태에 대한 구술 조사 등 기초 조사와 홍보, ▷남북 피폭자 교
류 및 공동대응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에 기여 해 나갈 뜻 밝혀

• 일시 : 2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1. 오늘 (2/21)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 원폭피해자 단체와 지원 단체는 일본
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인한 강제 징용과 피폭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온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
수대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은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시급히 선행하라”며 “실태조사는 미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규열 협회장은 “3.1운동 100주년 피폭 74년을 맞는 해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히로시마인 합천을 방문해 원폭피해자 위령제에 참가하여 한국원폭피해자문제 해결의 의지를 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한정순 한국원폭환우2세회 부회장은 “원폭 피해의 유전으로 대물림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폭2세들의 아픔을 헤아려 원폭피해 후손들을 포함한 전면 실태조사로 원폭의 유전성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4. 문규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 4차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정세의 진전에 발 맞춰 남북 피폭자들의 교류를 이끌어내고, 미, 일 정부의 원폭과 관련한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유수진 청년은 “한국에도 원자폭탄의 피해자들이 있는 줄 모르다가 평통사 활동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로 먼저 한국 원폭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의 실태조사를 위한 구술 작업에 참여하고 학내 동아리 모임, 합천 평화캠프를 개최하여 한국원폭문제해결을 위한 홍보활동들은 전개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6.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 이기열 서울지부장, 류병문 부산지부장 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부회장, 강호중 대경지부장, 성득찬 경남지부장, 심진태 합천지부장, 김태훈 한국원폭피해후손회 회장, 이태제 부산지회장, 박상복 서울지회장, 한정순 한국원폭환우2세회 부회장, 김봉대 한국 원폭환우2세회 고문(김형률추모사업회) 문규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이남재 합천평화 의집원장, 김형률추모사업회 김봉대, 강제숙, 윤혜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사회선교위원장, 이대수 한일반핵평화연대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평통사 김강연 사무처장

- 피해1세 :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 피해2세 : 한정순 한국원폭환우2세회 부회장. 김태훈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 회장,
김봉대 한국 원폭환우2세회 고문(김형률추모사업회)
- 지원단체 : 문규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청년들의 상징의식 : 청년들이 함께하겠습니다.
- 청년발언 : 구술 채록활동을 계획하며
- 기자회견문 낭독 : 심진태(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이남재(합천평화의집
원장) 황윤미(서울평통사 대표)
- 입장전달 : 이규열 협회장, 이기열 서울지회장 등

※ 기자회견문

3·1 운동 100주년을 맞은 우리의 입장

—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로 인한 강제 징용과 피폭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온 한국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금년은 3·1운동과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자주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해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온 선열들의 고귀한 뜻과 가르침이 우리 민족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지남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청산과 문제해결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해국은 여전히 사죄와 반성을 미룬 채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며 부정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74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은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강제징용과 피폭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온 한국원폭피해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잊힌 존재로 살아왔다. 한국원폭피해자들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10만여 명이 피폭당하여 5만여 명이 그 처참한 현장에서 방사성 물질로 뒤덮인 검은 비를 맞으며, 영문도 모른 채 고통스럽게 죽어갔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커녕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시급히 선행하라. 실태조사는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미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한 출발점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피폭을 당한 원폭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피폭 74년이 다 된 지금까지 한국원폭 피해자 및 그 후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 및 역학 조사가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피해자는 2,350명(2018년 12월 기준)만 남아 있다. 식민지배와 침략, 핵의 참상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이들의 평균 연령은 84세다. 몇 년 후면 피폭의 산증거가 모두 사라질지도 모른다.

부모가 피폭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사회적 편견 속에서 일반인보다 3.4~89배의 발병률을 가지고 각종 질환을 앓으며 병마 속에 살아온 피폭2세 등 후손들은 질환의 원인을 모른 채 피폭영향의 인과관계를 규명 받지 못하고 있다. 원폭 피해자 1세들과 2, 3세 등 후손들은 건강, 생활실태조사는 물론 의학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질환의 발병빈도와 질환의 원인, 피폭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부가 규명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에 제정된 원폭피해자특별법에는 1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원폭피해 후손들이 원폭피해자 정의와 대상에서 누락되어 조사 규명과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원폭피해자 2, 3세 등 후손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루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원폭 투하로 억울하게 희생된 5만여 명의 영령들은 아직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위령각을 건립하여 유골과 영령을 하루속히 모셔야 한다. 핵의 참상을 후세에 알려 두 번 다시 인류사에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핵평화공원을 조성(원폭희생자 추모비, 위령각, 자료관, 평화교육관)하여 평화교육에 힘써야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둘째, 3·1운동 100주년 대통령 기념사에서 한국원폭피해자 문제 해결과 지원 대책을 밝혀라. 한국원폭피해자 다수는 일본의 식민지배로 강제로 징용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일본에 끌려가 고통을 겪었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강제징용과 원폭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을 외면했고 일본 원폭피해를 위한 ‘원호법’에서도 한국원폭피해자들을 차별해왔다. 한국원폭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은 일제 강점기 아픈 역사의 증인이자 전쟁과 핵 피해의 산 증인이다.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 없이는 일제강점기 과거사 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 이에 3·1운동 100년 기념사에서 반드시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를 밝혀야 한다.

셋째, 올해는 원폭피해자들이 희생된 74주기가 되는 해이다.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합천에서 8월 6일 거행되는 74주기 원폭희생자 추모제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과 추모사를 간절히 요청한다. 한국원폭피해자의 고통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점, 미국의 원폭 투하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할 때 일본

과 미국 정부의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당연한 것이다. 일본은 히로시마 원폭희생자 위령제에 총리를 비롯한 수만의 인파가 참여하여 국가적으로 매년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세계 유일의 핵 피해국이라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원폭희생자 추모제에 국가적인 차원은 물론 지금껏 대통령이 참석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살아있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국가와 정부가 그동안 방기했던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협정에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합천의 원폭희생자 추모제에 꼭 참석해야 한다. 이는 미, 일 정부의 피폭과 관련한 책임 인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의 조치만 마냥 기다릴 수 없어 피폭자와 그 후손들의 역사적 아픔과 개인의 고통을 기록하고 알리며 같이하는 다양한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원폭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홍보 연구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2차 북미회담, 4차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정세의 진전에 발 맞춰 남북 피폭자들의 교류를 이끌어 내고, 미, 일 정부의 원폭과 관련한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 인류는 물론 모든 존재에 가공할 영향을 미치는 핵무기 피해는 당대를 넘어 후손들에게 까지 심각한 유전적 영향을 미친다. 원폭피해자인 한국, 일본 등의 핵 피해자들이 그 산 증거이다. 핵무기 피해자로서 한 많은 일생을 살아오고 대를 이어 그 후유증으로 대물림을 받고 있는 원폭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에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우리 모두가 대를 이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 한반도에 비핵평화를 이루어내는 첫걸음이다. 평화는 다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길이다. 비핵평화는 이제 되돌아 갈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공생의 노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을 통한 평화와 번영, 통일된 세상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9(피폭 74주기). 2. 21

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2세환우회

한국원폭후손회
합천평화의집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일반핵평화연대
김형률추모사업회
뜻에 동의하여 연명한 단체와 개인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고길천, 광주나비,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김미숙, 김영국 한국불교언론인협회 회장
김옥숙, 김재영, 김지곤, 김혜란, 김효식, 노수진, 노순천, 박수경, 백영제,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불교닷컴, 사기순, 손호목, 신종원, 영화사'탁주'조합,
오민욱, 원불교환경연대, 이로운, 이서후, 이승무, 이영근, 이인영, 임동욱, 임종철,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 전진숙, 정선희, 조석현, 지지협동조합, 초록을 그리다 - for
earth, 최소영,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 형복순, 홍성담, 황남덕, AWC한국위원회)